



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'2024년 집중안전점검' 본격 추진 - 「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」, 「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」도 논의 -

- ▷ 한덕수 국무총리,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
- ▷ 화재, 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「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」 논의
 - 한 총리,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발견된 안전 위험 요소를 즉시 보완토록 할 것”
 - “특히,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, 제방 등 홍수 취약시설·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”
 - 4.22~6.21(61일간), 사면·급경사지, 도로·교량·터널 등 2.6만여개소 안전 점검,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, 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전수조사 등
- ▷ 해양생물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「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」 수립
 - 한 총리, “기후위기, 해양생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,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
 - 해양보호구역 확대(^{23년}1.8% → ^{30년}30%, 전체 해양 기준), 해양보호생물종 추가 지정, 유해해양생물 등급제 도입, 해양생태관광 촉진 등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서울↔ 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다.
 - 이날 회의에서는 「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」, 「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」, 「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」을 논의했다.

< 안건 1.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>

-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·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.
-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*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각종 재난사고**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.
 - * 교량 28.8%, 터널 21.5%, 댐 시설 44.9% 등 준공 30년 경과('22년 기준)
 - ** 서천 특화시장 화재('24.1.22),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('23.10.3), 성남시 정자교 붕괴('23.4.5) 등
- 이에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 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.

▲ 건설현장 1,504개	▲ 도로·교량·터널 3,006개	▲ 사면·급경사지 등 3,421개
▲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46개	▲ 전통시장 430개	▲ 댐·저수지 827개
▲ 공동주택·숙박시설 2,650개	▲ 어린이놀이시설 1,275개	▲ 영화관·공연장 285개 등

1. 어린이 안전 강화

-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('20년 181건 → '22년 263건)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('20년 483건 → '22년 514건)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- 키즈카페,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,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,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,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.

2. 책임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

-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(최소 부단체장)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,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하여 형식적·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·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, 사면·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,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.

3. 안전문화 확산

-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.
- 또한 안전점검의 날(매월 4일)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·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.

4. 점검 후속 조치

-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 시정하고, 보수·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(통제, 대피 계획 수립 등) 후 행정절차를 이행(예산확보·보수 등)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점검 결과는 ‘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’을 통해 공개되며, 올해부터 지자체 ‘후속 조치율’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.

< 안건 2.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>

-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*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,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.

* (‘22, 지구생명보고서)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(상어, 가오리) 18종 71% 감소 (‘22. 네이처)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% 멸종위험 등

-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,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「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」을 수립하였다.

1.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

- 먼저, 지리적·지형적 중요지역,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‘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%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해양보호생물 지정·관리 체계를 개선하고,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(91종→120종) 하며,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.
-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,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·개체수를 확대하며,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, 관련 인프라를 확대*해 나갈 계획이다.

*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('25 준공)

2. 해양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

- 다음으로, 해파리·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*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한·중·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, 해파리 플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*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, 모바일 웹신고, 민관 합동 방제

- 아울러,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*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하여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,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·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* 무척추동물, 해조류, 어류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·고시('23.4)

3.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

-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, 갯벌생태마을 지정·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-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·국산화·표준화를 추진하고,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,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(ABS)*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* ABS(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-Sharing,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) :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

4.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

- 마지막으로, 생물다양성협약(CBD), 람사르협약, UNESCO*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,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.
- * '한국의 갯벌'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(세계유산위원회 권고, ~'26)
- 또한,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.

< 안건 3.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>

-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.
- △청년 분야, △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장용희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승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집중안전점검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대섭 (044-200-2365)
		담당자	사무관	전경민 (044-200-2342)
<공동>	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조정원 (044-205-4240)
		담당자	서기관	주으뜸 (044-205-4243)
담당 부서 <해양생물>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구본찬 (044-200-2252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정운 (044-200-2243)
<공동>	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	책임자	과 장	신재영 (044-200-5310)
		담당자	사무관	강성민 (044-200-531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